

못 미더운 광주·전남 '아동안전지킴이집'



폐업으로 해촉돼도 보강 안되고 학교에서 1km 떨어진 곳도

경찰 1694곳 운영...홍보 부족·관리 부실 대책 마련 시급

경찰이 운영하는 '아동안전지킴이집'이 곱돌고 있다. 학교폭력을 비롯, 실종·유괴 등 방지를 위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형식에 얽매어 내실화를 꾀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학교와 통학로, 놀이터 인근 가게를 지

◀“이곳 처럼 해주세요”

우수 아동안전지킴이집으로 선정된 광주시 동구 산수2동 율곡초교 인근 가람세탁소. 아동의 학교폭력 방지와 교통지도 등에 힘쓰고 있는 업주 이옥연(57)씨는 지난해 8월 장전배 전 광주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정해 위험에 처한 아동을 보호하도록 하자는 의도에 불구하고,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설치되지 않는가 하면, 홍보 부족으로 제도 자체를 모르는 학생들도 적지 않아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28일 광주·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광주·전남지역에서 운영되는 아동안전지킴이집은 1694개소(광주 464개소·전남 1230개소)에 달하지만 규모를 늘리는 데만 급급, 내실있는 운영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풍향초교 3학년 학생들이 지난해 학교 주변 500m 일대를 돌며 파악했지만 안전지킴이집의 경우 한 군데도 지정돼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지정 확대를 요청하

기도 했다. 지난해 개교한 광산구 혁신동 새별초교에서도 풍영정전을 건너는 하남교를 거쳐 1km를 걸어야 난남동 지킴이집 1곳(마트)을 찾을 수 있다.

아동안전지킴이집이 경찰과 지역사회가 함께 아동을 보호하는 치안시스템으로, 어린이가 범죄 위험에 처하거나 사고 또는 길을 잃는 등 위급상황에 놓였을 때 제도 자체를 모르는 학생들도 적지 않아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관리도 부실하다. 광주시 동구 소재 동구주남초교 인근 슈퍼마켓은 폐업한 상태지만 경찰청 포털사이트(safe182.go.kr)에는 지난해 2월 이뤄진 '지킴이집 정비·점검' 뒤에도 아동안전지킴이집으로 남아있는 등 점검이 부실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적극적인 홍보·교육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새로 지정되는 지킴이집도 눈에 띄게 줄었다. 지난해 아동안전지킴이집 37곳(광주 18곳·전남 19곳)이 폐업 등으로 사

라졌지만 광주지역에서 새로 위촉된 지킴이집은 한 곳도 없었다. 이 때문에 관련 사건이 발생할 때 부랴부랴 내놓았다가 관심이 사라지면 모른 척 하는 '냄비 행정'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지킴이집 위치와 도움 요청 방법 등에 대한 홍보도 적절하다.

지킴이집을 알리는 안내판이 천막 등에 가려 보이지 않는가 하면, 야간 시간에는 조명시설이 없는 탓에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지 못하는 실정이다. 초등학교 김모(11)군은 “지킴이집이 뭘지 물어본 적도 없어 뭘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전남지방경찰청은 현재 광주 464곳·전남 1230곳 등 1694곳의 아동안전지킴이집을 운영중이며 마트 등 상가(804곳)가 가장 많고 문구점(314곳)·편의점(176곳)·약국(77곳) 등이 지킴이집으로 지정돼 있다고 밝혔다.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수입산 염소고기 국내산 둔갑 판매 식당 등 9곳 적발

보양식 소비가 증가하는 틈을 타 수입산 염소고기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식당들이 적발됐다.

국립농산물관질국립원 전남지원(지원장 신동하)은 수입산 염소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해 온 식당 등 9곳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해 18일부터 25일간 광주와 전남 지역 염소고기 취급 음식점 124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농관원은 값싼 수입산 염소고기를 사용해 양탕 등의 메뉴를 만들어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7곳의 업주를 형사입건했다.

이들 업소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국내산 염소 도축검사증명서를 허위로 비치하는 등 증거를 은폐하거나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정하게 유통된 염소고기는 시가 2억7000만원 상당의 23에 달한다. /김대성기자 bigkim@

한전 입찰 비리 소송 몸살

가처분·민사 소송만 20건 넘어

한국전력이 최근 불거진 입찰 비리 문제로 소송 몸살을 앓고 있다. 불법적으로 이뤄진 '전기 공사'에 대한 전기 업체들의 가처분·민사 소송만 수십 건에 달한다. 한전이 최근 상법위원회를 열고 비리 업체별 '입찰참가자격' 제한 시기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또 다른 소송이 줄을 이을 것이라는 업계 안팎의 예상도 제기되고 있다.

◇부실한 시스템 관리가 화근...관련 소송만 수십건=28일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검찰의 '한전 입찰 시스템 조작 비리' 사건과 관련, 법원에 계류된 가처분·민사 사건만 20건이 넘게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당장, 검찰 수사가 시작된 뒤 곧바로 한전의 부실한 입찰 시스템 관리로 협력업체로 낙찰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6건의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사건이 접수됐다. 곧이어 이들에 맞서 낙찰업체 지위를 확인해달라는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2건), 낙찰자 지위를 확인하기 위한 취지로 6건의 '지위확인 소송' 등이 잇따랐고 한전의 입찰 비리 확인으로 이뤄진 재입찰 개시에 따른 입찰 절차 중지 가처분(5건) 등 관련 소송이 재판부에 잇따르고 있는 상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입찰 비리 사건을 비롯, 한전이 나주 혁신도시로 이전해오면서 한전 관련 소송이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가처분·민사 사건과 별도로, 한전 입찰 비리와 관련, 재판부 심리가 진행중인 형사 사건도 10건(24명)에 달한다.

연예가 한진이 최근 비리에 연루된 업체별로 일정 기간 입찰참가를 제한

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관련 업체들의 줄 소송도 예고되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재입찰 공고를 내면, 입찰절차를 중지하라는 소송을 내고 비리 연루 업체에 공사 중지 처분을 내리면 그 처분을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사사건건 반발하고 있다”면서 “최대 2년간 한전 전기 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불이익 등으로 처량이 극심하다”고 말했다.

◇건넌 돈에 따라...업체별 입찰참가자격 제한=한전은 지난 26일 입찰 시스템 조작 비리에 연루된 39개 전기 업체를 대상으로 상법위원회를 개최, 업체별로 3개월부터 최대 2년까지의 입찰 참가 기간을 제한하는 결정을 내렸다.

한전은 브로커에게 낙찰 대가 명목으로 건넌 액수를 기준으로 ▲2억원 이상일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2년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인 업체는 1년 ▲1000만~1억원인 경우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기로 했다. 전기 업체들과 낙찰 뒤 체결한 '청렴계약 특수조건'에 명시된 뇌물금액을 조건으로 제한 시기를 결정했다는 게 한전 측 입장이다.

검찰이 지난 2005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불법적 방법으로 낙찰받았다고 통보한 71개 업체 중 브로커에게 의뢰, 불법적 방법으로 낙찰을 받았지만 대가를 건넨지 않은 18개 업체는 제외했다고 한전은 설명했다. 한전 자회사가 발주한 공사를 불법 낙찰받은 업체(3개), 애초 적격심사 탈락업체(2개) 등도 제외됐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U대회 선수촌 스쿠터 순찰

28일 오후 유니버시아드 선수촌 경찰서서비스센터의 윤시연 팀장과 팀원들이 전기스쿠터인 'T 3 motion'을 타고 선수촌을 순찰하고 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대회기간 동안 선수촌 내에서 1일 3교대 근무하며 각국 선수단의 안전을 책임진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환자 사망 대학병원 5100만원 지급하라”

광주지법 판결

법원이 환자 사망에 대한 의료진의 책임을 물어 대학병원측에 5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광주지법 민사 14부(부장판사 조정웅)는 총수술기 절제술 등을 받은 뒤 숨진 60대 환자 A씨 가족들이 광주지역 사립대학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학교측은 51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 가족들은 지난 2012년 7월 해당 대학병원에서 A씨가 총수술기 절제술 및 담낭절제술을 받고 2차 수술을 거쳐 치료 중 호흡곤란 등으로 중환자실에서 옮겨진 뒤 숨지자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관련 의료진을 형사 고소하는 한편, 1억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학병원 의료진에게는 A씨 호흡 상태가 불안정했음에도 기도삽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환자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추정된다”면서 “학교측은 의료상 과실로 환자 가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의료진의 과잉진료, 설명의무 위반, 수술방식을 선택하는 과정에서의 과실 등 A씨 가족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조건 만남’ 미끼 남성 유인 금품 빼앗으려한 2명 구속

광주광산경찰청은 28일 이른바 ‘조건 만남’을 미끼로 상대남성을 유인해 폭행한 뒤 금품을 빼앗으려한 혐의(강도상해)로 서모(28)씨와 정모(20)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 등은 지난 11일 오후 10시10분께 광주시 광산구 신창동 한 원룸 앞에서 차에서 내리는 남(40)씨를 둔기로 10여 차례 폭행한 뒤 김씨의 비명을 듣고 주민들이 모이자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선루배 사이인 이들은 유혹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공모했으며, 스마트폰 채팅 앱(APP)에서 여성을 사칭해 김씨를 인적이 드문 원룸으로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채권 압류하러 오자 흥기 난동

채권 압류를 위해 자신의 집을 찾은 위헌 집행행위를 흥기로 위협한 50대 남성이 경찰장제 구속됐다.

○...28일 광주광산경찰청에 따르면 서모(55)씨는 지난 25일 오후 3시40분께 광주시 광산구 소촌동 A아파트에서 채권 압류판결에 따라 430만 원 상당의 가재도구를 압류하러 온 광주지방법원 집행관 문모(50)씨를 흥기로 위협하는 등 20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

○...서씨는 자신의 부인이 법원 판결에서 패소할 당시엔 부부가 아니었기 때문에 내 물건을 손을 댈 수 없다며 이 같은 소란을 부렸는데, 서씨는 “집행관을 따라온 채권자가 ‘돈은 없는데 집안 잘 먹고 잘살고 있네’라고 비아냥거리자 순간 화가 치밀었다”며 때늦은 후회. /박기용기자 pboxer@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 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8개>

| 사건번호 | 물건번호 | 소재지 및 면적 [㎡] | 용도 | 강제경매가액 [단위: 원] | 비고 |
|-------------|------|---------------------------------|-----|----------------|---|
| 2015타경 3097 | 1 | 북구 양산동 101 청양아파트 103동 1층 10 | 아파트 | 79,000,000 | |
| 2015타경 3592 | 1 | 광산구 도산동 56-5 보령해피드림 101동 1 | 아파트 | 158,600,000 | |
| 2015타경 2032 | 1 | 북구 문흥동 987-8 226.7㎡ | 대 | 229,557,620 | 일괄매각, 제시외 사무소, 단 사무소비유 [72.54㎡ 제시외 최고 11.52㎡ 독주목] |
| 2015타경 2254 | 1 | 북구 지산동 164-2 135㎡ [현황전부지일일 부도로] | 대 | 178,226,040 |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포함매각, 목 2매수인어게인 수외는전세권상형된거있음 |
| 2015타경 4335 | 1 | 북구 지산동 317-23 동산그린빌라 1층 103 | 다세대 | 177,000,000 | 경매조정되는채권 139.66㎡ |

| 사건번호 | 물건번호 | 소재지 및 면적 [㎡] | 용도 | 강제경매가액 [단위: 원] | 비고 |
|--------------|------|-------------------------------|------|----------------|---|
| 2014타경 24561 | 1 | 황순군 황순동 신거리 219 568㎡ [현황단독] | 대 | 183,310,000 | 매각대상외건물 주택단부지 [수목포함매각] |
| 2015타경 2674 | 1 | 서구 덕동동 10-1 3352㎡ | 답 | 502,800,000 | 근린공원외저촉권 |
| 2015타경 2865 | 1 | 영광군 영산면 아탈리 54 1369㎡ | 전 | 17,249,400 | 농지취득자격증명 |
| 2014타경 22978 | 1 | 북구 무등로180번길12, 3층 308호 21.70㎡ | 근린시설 | 20,000,000 | |
| 2014타경 30382 | 1 | 광산구 장덕동 990-15 1568.4㎡ | 공용공지 | 715,085,300 |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포함매각, 이 동가농고그린리터 일소유채시오전매각, 기계기구포함매각, 기계기구포함 중수변전설비포함 매각 [그외기계기구소재불명] |
| 2015타경 1756 | 2 | 달양군 홍산면 오우리216-1 2097㎡ [현상] | 과수원 | 62,910,000 | 농지취득자격증명 |

1. 매각방법: 2015. 7. 14. (화) 10:00
2. 매각결정일: 2015. 7. 21. (화) 10:00
3. 매각장소: 광주지방법원 집행관실
4. 매각방법: ① 입찰방법에 비추어 기밀입찰표에 사건번호, 집행관의 성명, 주소, 집행가격, 보증금, 보증금 지급처, 낙찰후 보증금 등을 집행본부에 제출하여 응찰하는 것이다. (최소보증금: 원고의 강제집행가액의 10%) ② 입찰표에 기재된 보증금의 10% 이상을 현금으로 납입하거나, 보증금의 10% 이상을 현금으로 납입하고, 나머지 90%는 입찰보증금으로 납입한다. ③ 입찰보증금의 10% 이상을 현금으로 납입하고, 나머지 90%는 입찰보증금으로 납입한다. ④ 입찰보증금의 10% 이상을 현금으로 납입하고, 나머지 90%는 입찰보증금으로 납입한다. ⑤ 입찰보증금의 10% 이상을 현금으로 납입하고, 나머지 90%는 입찰보증금으로 납입한다. ⑥ 입찰보증금의 10% 이상을 현금으로 납입하고, 나머지 90%는 입찰보증금으로 납입한다. ⑦ 입찰보증금의 10% 이상을 현금으로 납입하고, 나머지 90%는 입찰보증금으로 납입한다. ⑧ 입찰보증금의 10% 이상을 현금으로 납입하고, 나머지 90%는 입찰보증금으로 납입한다. ⑨ 입찰보증금의 10% 이상을 현금으로 납입하고, 나머지 90%는 입찰보증금으로 납입한다. ⑩ 입찰보증금의 10% 이상을 현금으로 납입하고, 나머지 90%는 입찰보증금으로 납입한다.
5. 채권압류: ① 채권압류를 집행관에게 신청하면, 집행관은 채권압류처분명령을 발령하고, 채권압류처분명령을 집행관에게 제출하면, 집행관은 채권압류처분명령을 집행관에게 제출한다. ② 채권압류를 집행관에게 신청하면, 집행관은 채권압류처분명령을 발령하고, 채권압류처분명령을 집행관에게 제출하면, 집행관은 채권압류처분명령을 집행관에게 제출한다. ③ 채권압류를 집행관에게 신청하면, 집행관은 채권압류처분명령을 발령하고, 채권압류처분명령을 집행관에게 제출하면, 집행관은 채권압류처분명령을 집행관에게 제출한다. ④ 채권압류를 집행관에게 신청하면, 집행관은 채권압류처분명령을 발령하고, 채권압류처분명령을 집행관에게 제출하면, 집행관은 채권압류처분명령을 집행관에게 제출한다. ⑤ 채권압류를 집행관에게 신청하면, 집행관은 채권압류처분명령을 발령하고, 채권압류처분명령을 집행관에게 제출하면, 집행관은 채권압류처분명령을 집행관에게 제출한다. ⑥ 채권압류를 집행관에게 신청하면, 집행관은 채권압류처분명령을 발령하고, 채권압류처분명령을 집행관에게 제출하면, 집행관은 채권압류처분명령을 집행관에게 제출한다. ⑦ 채권압류를 집행관에게 신청하면, 집행관은 채권압류처분명령을 발령하고, 채권압류처분명령을 집행관에게 제출하면, 집행관은 채권압류처분명령을 집행관에게 제출한다. ⑧ 채권압류를 집행관에게 신청하면, 집행관은 채권압류처분명령을 발령하고, 채권압류처분명령을 집행관에게 제출하면, 집행관은 채권압류처분명령을 집행관에게 제출한다. ⑨ 채권압류를 집행관에게 신청하면, 집행관은 채권압류처분명령을 발령하고, 채권압류처분명령을 집행관에게 제출하면, 집행관은 채권압류처분명령을 집행관에게 제출한다. ⑩ 채권압류를 집행관에게 신청하면, 집행관은 채권압류처분명령을 발령하고, 채권압류처분명령을 집행관에게 제출하면, 집행관은 채권압류처분명령을 집행관에게 제출한다.
6. 채권압류: ① 채권압류를 집행관에게 신청하면, 집행관은 채권압류처분명령을 발령하고, 채권압류처분명령을 집행관에게 제출하면, 집행관은 채권압류처분명령을 집행관에게 제출한다. ② 채권압류를 집행관에게 신청하면, 집행관은 채권압류처분명령을 발령하고, 채권압류처분명령을 집행관에게 제출하면, 집행관은 채권압류처분명령을 집행관에게 제출한다. ③ 채권압류를 집행관에게 신청하면, 집행관은 채권압류처분명령을 발령하고, 채권압류처분명령을 집행관에게 제출하면, 집행관은 채권압류처분명령을 집행관에게 제출한다. ④ 채권압류를 집행관에게 신청하면, 집행관은 채권압류처분명령을 발령하고, 채권압류처분명령을 집행관에게 제출하면, 집행관은 채권압류처분명령을 집행관에게 제출한다. ⑤ 채권압류를 집행관에게 신청하면, 집행관은 채권압류처분명령을 발령하고, 채권압류처분명령을 집행관에게 제출하면, 집행관은 채권압류처분명령을 집행관에게 제출한다. ⑥ 채권압류를 집행관에게 신청하면, 집행관은 채권압류처분명령을 발령하고, 채권압류처분명령을 집행관에게 제출하면, 집행관은 채권압류처분명령을 집행관에게 제출한다. ⑦ 채권압류를 집행관에게 신청하면, 집행관은 채권압류처분명령을 발령하고, 채권압류처분명령을 집행관에게 제출하면, 집행관은 채권압류처분명령을 집행관에게 제출한다. ⑧ 채권압류를 집행관에게 신청하면, 집행관은 채권압류처분명령을 발령하고, 채권압류처분명령을 집행관에게 제출하면, 집행관은 채권압류처분명령을 집행관에게 제출한다. ⑨ 채권압류를 집행관에게 신청하면, 집행관은 채권압류처분명령을 발령하고, 채권압류처분명령을 집행관에게 제출하면, 집행관은 채권압류처분명령을 집행관에게 제출한다. ⑩ 채권압류를 집행관에게 신청하면, 집행관은 채권압류처분명령을 발령하고, 채권압류처분명령을 집행관에게 제출하면, 집행관은 채권압류처분명령을 집행관에게 제출한다.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① 채권압류를 집행관에게 신청하면, 집행관은 채권압류처분명령을 발령하고, 채권압류처분명령을 집행관에게 제출하면, 집행관은 채권압류처분명령을 집행관에게 제출한다. ② 채권압류를 집행관에게 신청하면, 집행관은 채권압류처분명령을 발령하고, 채권압류처분명령을 집행관에게 제출하면, 집행관은 채권압류처분명령을 집행관에게 제출한다. ③ 채권압류를 집행관에게 신청하면, 집행관은 채권압류처분명령을 발령하고, 채권압류처분명령을 집행관에게 제출하면, 집행관은 채권압류처분명령을 집행관에게 제출한다. ④ 채권압류를 집행관에게 신청하면, 집행관은 채권압류처분명령을 발령하고, 채권압류처분명령을 집행관에게 제출하면, 집행관은 채권압류처분명령을 집행관에게 제출한다. ⑤ 채권압류를 집행관에게 신청하면, 집행관은 채권압류처분명령을 발령하고, 채권압류처분명령을 집행관에게 제출하면, 집행관은 채권압류처분명령을 집행관에게 제출한다. ⑥ 채권압류를 집행관에게 신청하면, 집행관은 채권압류처분명령을 발령하고, 채권압류처분명령을 집행관에게 제출하면, 집행관은 채권압류처분명령을 집행관에게 제출한다. ⑦ 채권압류를 집행관에게 신청하면, 집행관은 채권압류처분명령을 발령하고, 채권압류처분명령을 집행관에게 제출하면, 집행관은 채권압류처분명령을 집행관에게 제출한다. ⑧ 채권압류를 집행관에게 신청하면, 집행관은 채권압류처분명령을 발령하고, 채권압류처분명령을 집행관에게 제출하면, 집행관은 채권압류처분명령을 집행관에게 제출한다. ⑨ 채권압류를 집행관에게 신청하면, 집행관은 채권압류처분명령을 발령하고, 채권압류처분명령을 집행관에게 제출하면, 집행관은 채권압류처분명령을 집행관에게 제출한다. ⑩ 채권압류를 집행관에게 신청하면, 집행관은 채권압류처분명령을 발령하고, 채권압류처분명령을 집행관에게 제출하면, 집행관은 채권압류처분명령을 집행관에게 제출한다.
8. 주의사항: ① 채권압류를 집행관에게 신청하면, 집행관은 채권압류처분명령을 발령하고, 채권압류처분명령을 집행관에게 제출하면, 집행관은 채권압류처분명령을 집행관에게 제출한다. ② 채권압류를 집행관에게 신청하면, 집행관은 채권압류처분명령을 발령하고, 채권압류처분명령을 집행관에게 제출하면, 집행관은 채권압류처분명령을 집행관에게 제출한다. ③ 채권압류를 집행관에게 신청하면, 집행관은 채권압류처분명령을 발령하고, 채권압류처분명령을 집행관에게 제출하면, 집행관은 채권압류처분명령을 집행관에게 제출한다. ④ 채권압류를 집행관에게 신청하면, 집행관은 채권압류처분명령을 발령하고, 채권압류처분명령을 집행관에게 제출하면, 집행관은 채권압류처분명령을 집행관에게 제출한다. ⑤ 채권압류를 집행관에게 신청하면, 집행관은 채권압류처분명령을 발령하고, 채권압류처분명령을 집행관에게 제출하면, 집행관은 채권압류처분명령을 집행관에게 제출한다. ⑥ 채권압류를 집행관에게 신청하면, 집행관은 채권압류처분명령을 발령하고, 채권압류처분명령을 집행관에게 제출하면, 집행관은 채권압류처분명령을 집행관에게 제출한다. ⑦ 채권압류를 집행관에게 신청하면, 집행관은 채권압류처분명령을 발령하고, 채권압류처분명령을 집행관에게 제출하면, 집행관은 채권압류처분명령을 집행관에게 제출한다. ⑧ 채권압류를 집행관에게 신청하면, 집행관은 채권압류처분명령을 발령하고, 채권압류처분명령을 집행관에게 제출하면, 집행관은 채권압류처분명령을 집행관에게 제출한다. ⑨ 채권압류를 집행관에게 신청하면, 집행관은 채권압류처분명령을 발령하고, 채권압류처분명령을 집행관에게 제출하면, 집행관은 채권압류처분명령을 집행관에게 제출한다. ⑩ 채권압류를 집행관에게 신청하면, 집행관은 채권압류처분명령을 발령하고, 채권압류처분명령을 집행관에게 제출하면, 집행관은 채권압류처분명령을 집행관에게 제출한다.

2015. 6. 29.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박종희**